

30~40대에 열심히 벌어도 ... 58세부터는 '적자 인생'

임금·자영업 소득으로 인생 적자
29~57세 흑자... 43세가 정점

노동연령층서 거둔 세금 106조
유년층 57조, 노년층 49조 배분

한창 젊을 때 벌여놓은 임금·자영업 소득만으로는 '인생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상 43세 때 흑자 정점을 찍고 58세 이후론 적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국민이전계정' 통계에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0~14세 유년층은 118조원 적자를 냈다. 소득이 없고 소비만 있어서다. 15~64세 노동연령층은 87조원 흑자, 65세 이상 노년층은 82조원 적자를 각각 냈다. 생애주기 적자 총량은 전년 대비 11.7% 감소한 112조8000억원을 기록

했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소비가 2.8% 늘어난 반면 노동소득이 5.4% 증가해 생애주기 적자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06조원을 정부가 14세 이하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원을 배분한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태어나서부터 28세까지 적자로 살다 29~57세는 흑자로 돌아섰다. 그리고 58세 이후로는 줄곧 적자가 늘어났다. 쉽게 말해 젊을 때 벌여 유년·노년 때 먹고사는 구조인데 전체적으로는 적자란 얘기다.

국민이전계정은 올해 처음 발표한 국가통계다.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 등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전·배분되는지, 소비는 어떤 연령에서 얼마나 이뤄지는지 보여주는 재분배 지표다. 생애주기 흑자·적자는 상속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과 금융 소득 등을 제외한 순수 '노동소득'에서 소비를 빼



서 산출했다. 최 실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라고 소개했다.

1인당 따져봤을 때 유년층 적자는 16세에서 2460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연령층에서 흑자는 43세에서 1306만원으로 가장 컸다. 소비를 뜯어보면 민간 교

육 소비는 16세에서 1인당 511만원으로 최대, 민간 보건 소비는 75세에서 1인당 130만원으로 최대, 민간 기타 소비는 32세에서 1인당 1324만원으로 최대를 각각 나타냈다. 다만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적자 연령대는 점차 늦어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1인당 노동소득을 소비가 앞지르는 연령은 2010년 56세였다가 2011년 57세로 높아졌고 2015년 58세까지 올라갔다. 고령화에 따라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5년 65세 이상의 노동소득도 약 1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4% 늘어났다.

이번 발표는 198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케인스학파의 석학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라이프 사이클 가설'과 상통한다.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거나 혹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하지만 소득은 일반적으로 중년기에 가장 높고 유년기·노년기에는 낮다. 모딜리아니는 이 가설에 따라 소비가 현재 소득이나 자산뿐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기대되는 미래 소득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28.2 X 11.4 cm

43세에 소득 정점뒤 58세부터 '적자 인생'

노동소득 43세때 年2896만원 최다
정부, 15~64세에 세금 106조원 걷어
유년층에 57조-노년층에 49조 배분

한국인이 월급이나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노동소득)은 43세에 가장 많고, 이후 감소해 58세부터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얻는 자산소득은 51세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2015년 기준 43세에 연 2896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나이 때는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 1306만 원 흑자가 났다. 1인당 노동소득은 소득이 없는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낸 것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벌어들인 평균소

득과 차이가 있다.

1인당 임금소득은 40세에 연 2759만 원으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은 51세에 연 275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이나 상가 등 자산에서 얻는 1인당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51세에 80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했다.

정부는 2015년 기준으로 15~64세가 낸 세금 중 106조 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은 교육, 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56조6000억 원, 노년층은 보건, 연금, 사회보호 등으로 49조4000억 원을 받았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로 소득 이전과 소비 액수 등을 파악해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2019년 01월 23일 (수)
B01면 경제

생산가능인구가 낸 세금 어디로 흘러가나
2015년 기준.



재분배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처음 발표됐으며 매년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28.7 X 7.1 cm

58세 되면 ‘인생’ 다시 적자로

통계청 ‘2015년 국민이전계정’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06조
유년층 57조·노년층 49조로 배분

노동연령층(15~64세)이 낸 세금 중 106조원이 유년층(14세 이하)에 57조원, 노년층(65세 이상)에 49조원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재정에 따른 공적 배분보다 가족 간 증여 등 사적 배분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이전(移轉)계정’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올해 처음 발표한 국가통계로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이 세대

별로 어떻게 재배분되는지 보여준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정책을 개발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잉여액 106조원 가운데 56조6000억원이 유년층으로 이전됐다. 주로 교육 부문에 집중됐다. 노년층에는 보건·연금·사회보호 목적으로 49조4000억원이 배분됐다. 조세 외에 자산까지 포함한 공공연령 재배분 규모는 58조2000억원이었다. 가계 재정과 자산이 연령대별로 재배분된 총액인 167조7000억원에 비해 한참 적은 규모다. 김현경 통계청 사무관은 “정부의 역할이 큰 복지국가에서는 공공연령 재배분 비

중이 더 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간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연령대별 재배분이 발생하는 것은 생애주기별로 소비 대비 노동소득이 ‘적자→흑자→적자’ 구조를 거치기 때문이다. 교육 지출이 많은 유년기와 청년기에 적자를 기록하다 취업에 성공해 흑자로 돌아서고, 퇴직 후 보건·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노년이 되면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0년 기준 흑자 전환 시점은 27세, 적자 전환 시점은 56세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2세씩 늦어져 각각 29세, 58세를 기록했다. 취업이 늦어지고 고령화로 늦게까지 일하는 추세가 반영된 탓이다.

신수지 기자
16.8 X 9.8 cm

인생 최대 적자는 16세 때 '2460만원'

<소득<지출>

2015년 소비·소득 통계

최대 흑자는 43세 1306만원
29~57세 흑자, 58세부터 적자

출생 후 28세까지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 29세가 돼야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가장 큰 시기는 16세였고, 흑자가 가장 큰 시기는 43세였다. 적자상태에서의료비나 교육비 등은 복지를 통해 충당하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 등 가족의 도움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모든 연령대의 소비와 소득을 보여주는 통계로, 경제적 자원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알 수 있도록 개발됐다.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생애주기별로 적자와 흑자, 적자가 차례로 발생했다. 태어나서 28세까지는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 29세부터 57세까지는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58세부터는 연령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커졌다. 흑자폭이 가장 컸을 때는 43세로 1306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이 가장 큰 시기는 16세로 2460만원에 달했다. 소비가 소득보다 많으면 '적자', 소득이 소비보다 많으면 '흑자'다.

이를 전체 인구구조에 대입하면, 0~14세 유년층은 118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은 없고 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81조6000억원 적자였다. 소득은 19조6000억원이었지만 의료비 지출 등으로 소비(101조2000억원)가 더 많았다. 반면 15~64세

2015년 1인당 생애주기 연령재배분 단위: 원, 자료: 통계청



노동연령층은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 87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0~14세와 65세 이상 노년층의 적자는 15~64세가 낸 세금과 상속, 용돈 등을 통해 메꿨다. 총당된 규모를 보면, 세금 등의 공공부문보다 상속이나 증여 등 민간부문의 규모가 컸다. 공공부문을 보면, 15~64세가 낸 세금 106조원 가운데 0~14세 유년층이 교육·보건·기타 부문을 통해 56조6000억원을 이전받았다.

65세 이상 노년층은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에서 49조4000억원을 배분받았다. 민간부문에서 15~64세 노동연령층은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94조3000억원이 순유출됐다. 0~14세 유년층은 63조원이, 65세 이상 노년층은 25조6000억원이 각각 순유입됐다. 나머지 5조6000억원가량은 해외에 거주한 가구로 순유출됐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노인 약값·청소년 책값 등 '가정 필수비용' 한국, 복지국가들보다 공공부담 비중 적다

통계청 '2015년 국민이전계정' 발표 민간부문 171조·공공부문 5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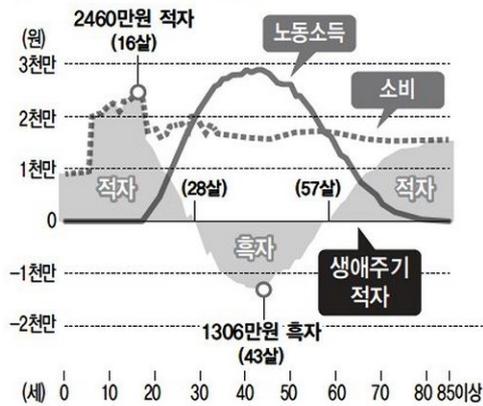
교육·보건·연금 등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소비지출이 여전히 국가와 사회시스템보다 가족 간 증여 등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사적 이전소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 개발해 발표한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나타난 이전소득의 총량(연령 재배분)은 공공이 58조3천억원, 민간이 171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장년층 소득이 교육·보건 등 목적으로 유년·노년층에 이전되는 방식이 가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추산한 연도별 이전소득 총량에서도 2015년까지 공공 부문의 확대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5조7천억원 수준이었던 공공연령 재배분 총액은 2015년 58조2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연령 재배분 총액은 167조7천억원에서 171조원으로 3조3천억원 늘었다. 김현경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은 "정부의 역할이 큰 복지국가에서는 공공연령 재배분 비중이 더 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인별 생애주기 적자 흐름

자료: 통계청 '2015년 국민이전계정'



민간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대 간에 발생하는 이전소득은 생애주기상 소득과 지출의 '미스매치' 탓에 발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주기 소비지출은 연령별로 '적자·흑자·적자'의 구조를 거치게 된다. 유년기와 청년기에 적자를 기록하다, 취업에 성공해 흑자로 전환하고, 노년이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생애주기상 흑자 전환 시점은 28살, 적자 전환 시점은 58살이었다. 생애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는 시기는 16살(2460만원 적자),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시기는 43살(1306만원)이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13.2 X 17.9 cm

'철인' 43세... 소득 가장 높지만 유·노년 부양비용도 최고

통계청, 2015 국민이전계정 발표

2896만원 벌어들여 공공이전에 636만원 써

미래 위험요인 우려... 선제적 대비 필요

한국인에게 '마흔 셋'이라는 나이는 어떤 의미일까. 생애 전체를 볼 때 43세에 최고의 '흑자'를 내지만, 유년·노년층을 먹여 살리는 데 허리가 휘다. 2015년 기준으로 85세까지 사는 동안 43세에 소득의 여유가 가장 커지고, 이때 사회안전망 구축 비용(세금 등)을 가장 많이 낸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22일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별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인은 유년층

(0~14세)에 적자였다가 일을 하는 노동 연령층(15~64세)이 되면 흑자로 돌아서며, 노년층(65세 이상)에 다시 적자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고 밝혔다. 소비보다 노동소득이 많으면 흑자, 적으면 적자다. 1인당 생애주기별 적자·흑자의 흐름을 보면 16세 때 적자 규모(연간 2460만원)가 제일 크다. 노동연령층에 진입하고 나서는 43세에 가장 큰 흑자(1306만원)를 기록한다. 노년층이 되면 적자가 짙는다.

43세는 소득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다. 43세의 1인당 노동소득(임금소득+자영업자노동소득)은 연간 2896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다. 다만 그만큼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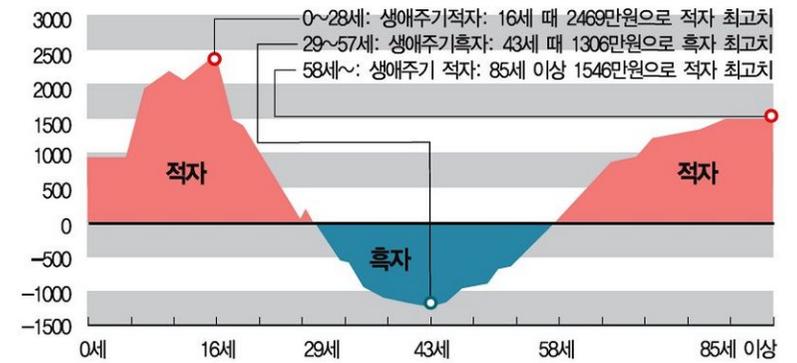
도 무겁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흑자인 노동연령층이 낸 비용으로 유년·노년층 적자를 메꾸는 구조라서다.

정부가 일부 연령대에서 세금 등을 걷어 취약 연령대 교육·연금·건강보험 등을 지원하는 공공이전은 15~64세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약 106조원에 이른다. 이 돈은 유년층(56조 6000억원)과 노년층(49조 4000억원)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15~64세 중에 43세는 공공이전 비용 지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636만원을 부담한다. 여기에는 공교육을 위한 비용(연간 167만원), 연금 재정을 위한 지출(연간 99만원)이 포함돼 있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

1인당 생애주기 적자·흑자(소비-노동소득)의 흐름

2019년 01월 23일 (수)
10면 종합
2015년 기준 (단위: 만원)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크면 '적자',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적으면 '흑자' (자료: 통계청)

실장은 "국민이전계정의 2010~2015년 추이를 보면 보건비용 등 노년층 공공소비(노년층이 아래 세대로부터 받는 공공이전 금액)가 증가하는 것이 미래 위험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31.4 X 10.4 cm

43세 때 소득 정점 ... 58세부터 ‘적자 인생’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발표

29세부터 소득이 소비 추월
65세 이상 노인 보건지출 급증

개인 평균 노동소득이 43세에 28%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8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낮아지는 ‘적자 그래프’를 그렸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을 처음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 통계는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소비, 공적·사적 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집계 등에 쓰이는 국민계정자료를 활용해 연령별 소득과 소비 추이를 분석해 산출한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번 통계 개발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고 세금이 세대 간 어떻게 배분될지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평균적인 한국 국민은 태어나서 28세까지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을 산다. 이후 29세부터 57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다가 58세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선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서 적자를 가장 크게 보는 연령은 각각 14세(2295만원)와 85세 이상(1억5464만원)이었다. 흑자액은 43세에서 1306만원으로 가장 컸다.

연령별 총액으로 보면 유년층이 노동소득 없이 118조원을 소비했다. 15~64세 인구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87조원 많았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노동소득보다 소비가 82조원 많았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액은 정부의 공적 이전과 15~64세 인구의 증여 등 민간 이전이 메꿨다. 정부는 2015년 15~64세 인구가 낸 세금 중 106조원을 유년층

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원 배분했다.

소비부문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공공 보건지출 급증이 두드러졌다. 2015년 공공 보건 소비 총액은 59조8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늘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23조1000억원)가 1년 만에 11.1% 늘어난 영향이 컸다. 같은 해 노년층에서 17조9060억원의 보건 순유입이 발생하는 동안 15~64세 인구에서는 21조1680억원의 보건 순유출이 일어났다. 노년층에 들어가는 공공 보건 비용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노동연령층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전체의 지출을 감당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전체적인 노동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은퇴 연령을 늦추는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17.3 X 11.9 cm

우리나라 국민 29세부터 ‘흑자 인생’... 58세 들어서면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9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처음 진입해 43세에 정점을 찍은 후, 58세부터 다시 적자 신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없는 유년기엔 주로 부모가, 노년기엔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할 때 사용되는 국민계정자료를 활용해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수준을 집계한 자료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1인당 GDP가 3만달러면 모든 국민이 3만달러의 소득을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론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먼저 2015년 기준 0~14세 유년층은 118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은 없는데,

소비가 118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년층 역시 81조6,000억원의 적자(노동소득 19조6,000억-소비 101조2,000억)였다. 반면 15~64세 노동연령층은 유일하게 87조원 흑자(소득 733조2,000억-소비 646조2,000억)를 거뒀다.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적자(0~28세)→흑자(29~57세)→적자(58세 이상)’의 3단계 구간이 나타났다. 1단계에서 16세에 적자 폭(2,460만원)이, 2단계 구간에선 43세 때 흑자 폭(1,306만원)이 가장 컸다. 젊은 시절 열심히 돈을 벌어 유년기와 노년기 때 먹고사는 구조인 셈이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유년층과 노년층은 정부나 부모로부터 소득을 지원받아 소비를 유지했다. 노년층은 △공공이전(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 49조원 △민간이전(부모 부양 등) 26조원 △자산



**유년층 118조원 적자
부모의 지원으로 소비 유지**
**65세 이상 적자 80조원
정부가 기초연금 등으로 메워**

재배분(이자·배당소득 등) 7조원 등을 통해 81조6,000억원의 적자를 메웠다. 유년층의 소비재원 또한 민간이전(자녀양육·63조원)과 공공이전(공교육 및 보건 등·57조원)이 대부분이었다. 노년층 부양은 국가가, 유년층 양육은 부모가 주로 담당하는 구조인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국은 노년층이 (젊은 시절 축적한) 자산을 토대로 사는 반면, 유럽은 정부의 노후소득 보장이 잘 돼 있다”며 “우리는 유럽과 미국의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노년층에 대한 공공이전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계청은 노년층의 의료비 증가가 재정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년층의 공

공보건소비 규모는 2010년 약 13조9,300억원에서 2015년 23조1,000억원으로 5년 새 66%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년층 의료비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계속 늘어나는데 (향후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에선 취업난과 고령화의 여파도 감지된다. 1인당 총소득에서 총소비를 뺀 값이 적자가 되는 연령이 2010년 56세→2011~2013년 57세→2014~2015년 58세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은퇴를 미루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1인당 총소득이 총소비를 앞질러 흑자가 되는 연령은 2010년 27세에서 2015년 29세까지 상승했다. 청년층이 취업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43세 때 노동소득 정점 찍고, 58세부터 '적자'

年 2896만원 최대... 65세 땀 811만원
노동연령층 줄면 노년층 부양부담 커져

1인당 노동소득이 43세 때 정점을 찍은 뒤 58세 이후에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애 주기상 15~64세 노동연령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을 부양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구조상 유년층 감소세가 지속되면 향후 노동연령층 감소로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자 1인당 노동소득(임금+자영업자 소득)은 43세 때 연 2896만원으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많았다. 1인당 노동소득은 생산가능연령인 15세 때부터 점차 상승해 43세 때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줄어 65세는 연간 노동소득이 811만원으로 떨어졌다. 국민이전계정은 2010~2015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내외 가구간 사적이전 등

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 발표됐다. 정부는 2015년 기준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06조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한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0세에 1174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원으로 가장 많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 보건, 기타 부문으로 56조 6000억원을 이전받으며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 부문으로 49조 4000억원을 배분 받는다. 유년층의 민간교육 소비는 12조 7840억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앞으로도 사교육비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노년층의 소비는 대부분 공공보건 소비(31조 9000억원)였다. 이는 전체 공공보건 소비의 38.6%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번 국민이전계정 개발은 노동연령층이 벌어서 어린이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13.3 X 13.1 cm

한국인 1인당 노동소득 43세때 '최대'

통계청, 65세때 811만원으로 ↓/임금소득은 40세에 가장 많아/국내 거주자 노동소득 753조원 우리 국민의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서 정점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43세 때 연 2896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다.

1인당 노동소득은 생산 가능 연령으로 진입하는 15세부터 점차 늘어나 43세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했다. 65세의 경우 연간 노동소득이 811만원, 75세는 138만6000원이었다.

노동소득은 임금소득과 자영자(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노동소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동소득이 없는 거주자까지 포함해 평균을 구한 것이어서 직업이 있는 이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노동소득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1인당 임금소득은 40세에 2759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고, 자영자 1인당 노동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은 51세로 205만원이었다. 자영자의 1인당 노동소득은 자영자의 노동소득 총액을 전체 거주자 수로 나눠서 구하기 때문에 자영자가 벌어들이는 평균적인 노동소득과는 다르다.

2015년 국내 거주자의 전체 노동소득은 약 75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5.4%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동소득은 약 19조6000억원으로 비중은 적지만 비율이 전년보다 12.4% 크게 늘었다.

2015년 생애주기적자 규모(단위: 원)



자료: 통계청

2015년 기준 생애주기적자 총량값은 112조8000억원이었다. 전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빼 액수가 113조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전년에 비해 노동소득이 5.4% 늘면서 생애주기적자도 전년(127조8000억원) 대비 11.7% 감소했다.

유년층(0~14)과 노년층은 각각 118조1000억원, 81조6000억원의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했고, 노동연령층(15~64세)에서는 87조원 흑자가 발생했다. 1인당 유년층 적자는 16세에서 2460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고, 1인당 노동연령층 흑자는 43세에 13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공공이전 106조원은 정부를 통해 14세 이하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 내 상속이나 증여 등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으로는 15~64세가 94조3000억원을 14세 이하(63조원)와 노년층(25조6000억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 소비와 민간 소비는 노동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고, 노년층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14.4 X 21.0 cm